

# 민주, 오늘 국회의장 경선... '명심' 논란은 증폭

6선 추미애·5선 우원식 '2파전' 秋 추대 분위기... 李 의중 반영 '민주주의 후퇴' 우려 목소리 '이 대표 연임론' 대세 굳어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장 경선을 앞두고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은 어차피 추미애 당선인 아니냐"는 말이 퍼지면서 '명심 개입'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연다.

6선의 추미애 후보, 5선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진다.

당초 의장 후보 등록 때만 해도,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까지 총 4명이 나와 4파전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사이 조 의원과 정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면서 남은 두 후보만 경선을 완주하게 됐다.



추미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정 의원을 만나 설득했다고 전해졌다.

당 안팎에선 국회의장 후보 등록 이후 사퇴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만큼,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공개적으로 추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총선 상황실장을 지낸 김민석 의원,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등은 추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강성 친명 조직으로 당 최대 의원 모임으로 격상한 더민주혁신회의와 당내 강경파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도 추 후보 지지로 사실상 뜻을 모았다.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 (개혁의

딸)은 '추미애 국회의장 추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를 두고 '명심'이 작용한 것이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입법부의 수장을 선출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론도 나온다.

4선 이상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5선, 6선 중진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 같은 게 들었다"며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혹은 본인에게 어떤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거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4·10총선 압승 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욱 견고해지면서 당내 건전한 경쟁은 사라지고 '친명' 추대만 남아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명심으로 인한 후보 교동정리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장 추대 분위기는 원내대표 단독 입후보에 이어,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추대 수순으로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 연임론'이 대세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22대 총선 압승의 주역으로 당 대표 연임이 '정권교체의 지름길'이라며 앞다퉈 연임 추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대표는 6월중 당권 재 도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제1야당 내에서 정작 건전한 경쟁과 비판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 이재명, 입원치료 마치고 퇴원... 오늘 당무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약 일주일간의 입원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이 대표는 휴식을 취한 뒤 16일부터 당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당 대표실 관계자는 출입기자단에 "이 대표가 오후에 퇴원했다. 이 대표는 15일까지 휴식을 취한 후 16일에 당무에 복귀한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부터 입원 치료를 위

한 휴가 기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4·10 총선으로 하지 못했던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물혹 제거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병명이나 증상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16일 당선자 총회를 열어 국회의장 후보 경선 투표를 진행하는데 이 대표도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선욱 기자

## 정다운 시의원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지원"

정다운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광주시 이주노동자 및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정의·책무·기본원칙 등 총괄사항을 규정하고,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 추진,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경제활동과 연관된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 없이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피부와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되는 안 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2021년 2만934명, 2022년 2만2976명, 2023년 2만534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종료에 따라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2023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은지 기자

## 최명수 도의원 "영세민 사기범죄, 법정최고형을"

영세민을 대상으로한 사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정최고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최명수 의원(나주2·사진)은 최근 본회의 발언에서 "4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사기 범죄, 법정최고형도 부족하다"며 영세 상인과 사회적 약자를 노린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가게통폰' 사기조직 검거로 알려진 부산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킥서비스 일을 하며 갓난아기까지 포함해 자녀만 셋을 부양하던 어느 40대 가장이



사기범죄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연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영세 상인들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한 가혹한 사기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범죄 중 사기죄가 20%를 넘어선 이유가 한국의 형량이 미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라도 전세사기, 대출유인,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형량을 법정 최고형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 尹 "부처님 마음 새기며 민생 챙길 것"

### 조계사 봉축 법요식 참석 "올바른 국정 펼치는 데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인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대한불교조계종이 주관했으며 봉축 표어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치열한 정진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 왔다.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해주고 있다"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 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조국혁신당 조국(왼쪽) 대표와 인사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 및 나옹선사, 지공선사의 사리가 지난 4월 18일 100년 만에 고국으로 반환된 것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환지부처(본래의 곳으로 돌아감)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요식은 조계사 연합합창단의 삼귀례(三歸依禮)를 시작으로 반야심경 낭송, 관불, 마정수기 봉행, 찬불가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김선욱 기자

## 서삼석 '저출생고령화 대응기획부' 명칭 변경 요구

### "고령화 선제 대응해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사진)은 15일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신설될 주무 부처의 명칭(저출생대응기획부)을 '저출생고령화대응기획부'로 변경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교육·노동·주거·복지 등 각 분야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효과에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시각으로 주무부처 명칭 변경을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 일 취임 2



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사회부총리급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노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정부 내 인구 문제를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정체성과 위상을 확고히 정립하지는 않겠다"면서 "평균수명 연장 및 저출산 기조로 인한 고령화가 늘어남 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노인의 보건·교육·교육 문제 등을 지속·전문적으로 대응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 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고, 2072년에는 1727만명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고령인 중위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72년 63.4 세까지 증가해 인구의 절반 이상이 환갑을 넘을 전망이다.

지난 4월 기준 고령화율은 19.3%로 전년 12월(19%) 대비 0.3%(18만명) 증가했다.

고령화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17개 광역시도 중 9개가 이미 진입했고, 이중 전남도가 26.5%로 가장 높다.

서울·김선욱 기자